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4년 9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9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국민연금법 제5조)
* 출석위원 16인 중 2인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 이견 제시

-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5차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 ① 노후소득 강화 ② 세대형평 제고 ③ 재정 안정화 ④ 기금운용 개선 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연구추계(통계청, '23.12)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렴하였다”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층	개인연금(457만명) ※ '22년말		
2층		퇴직연금(653만명) ※ '22년말	직역연금(183만명)※ '22년말
1층	국민연금(2,238만명) ※ '23년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0층	기초연금(651만명) ※ '23년말		
(빈곤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세 가지이다.

■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① 보험료율 인상

-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 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 기로 하였다.

②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 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 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③ 기금수익률 제고 : 1%p + α

-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 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④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 현재 국민연금 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

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年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年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年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② 지급보장 명문화

-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셋째,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② 기초연금: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 저소득 어르신들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

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③ 퇴직연금: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음**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

** (300인 이상) 91.9% > (30인 이상~299인) 78.2% > (30인 미만) 23.7%

-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 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23.7~)

-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개인연금: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

-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457만 명이 가입(2022년 기준)해있고, 적립금은 169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택권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333. 국민연금정책과. 2024. 9. 4.

II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

- 2024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9.5) -
- 보건복지부,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 추진 등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5일(목) 16시 30분 서울스퀘어(서울 중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데이터 관련 각 분야*를 대표하는 2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 의료계, 연구계, 학계, 법률·윤리계, 환자·사용자단체, 보건산업계, 공공기관

■ 이번 위원회에서는 ▲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 ▲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 >

- 이번 로드맵은 AI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활용 생태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① 인공지능 의료 기술 사업화 확대, ② 기술격차 단축, ③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 이번 로드맵을 통해 필수의료, 신약개발 등에 AI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4대 전략 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을 도모한다. 응급의료, 중증질환, 암 등 필수의료 중심의 AI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의료진-환자 간 소통을 지원, 진료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 * (예시) 환자-의료진간 상담내용을 자동으로 병원시스템에 입력 및 환자에게 요약제공 등
- 또한, AI 기반 디지털치료기기와 의사와 협업 가능한 수술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후보물질 발굴, 임상연구·시험 등 신약개발 전(全) 과정에서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보건의료데이터를 AI 연구자, 기업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 지원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AI 개발·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의료 AI가 현장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개발·확산을 위한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① 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제고, ② 환자주도 건강·진료정보 공유, ③ 의료 빅데이터 구축·개방, ④ 의료데이터 활용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해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병원마다 상이한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고자 교류에 필수적인 항목을 정의하여 한국 핵심교류데이터(KR CDI)와 전송표준(KR Core)을 마련·고시하였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가동하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의료정보를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하고, 동의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860개 의료기관 참여)

- 올해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개시하여 임상·유전체·공공·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포함한 77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데이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임상 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 등을 통합하여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는 R&D 사업 (1단계 '24~'28년, 77.2만 명 모집)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암센터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의료데이터를 연구·통계·정책활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목적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R&D 데이터를 기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자 친화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24년 하반기에 분석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14년부터 건강보험 DB를 활용하여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정부·공공·금융기관에 마이데이터 제공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HIRA 빅데이터 개방 포털을 통해 2015년부터 진료정보·의약품·의료자원 DB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연구분석, 공공데이터 개방 및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등 공공과 민간분야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 국립암센터는 2021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되어 암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개발을 위해 암공공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있으며, 글로벌 융합형 국가암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부는 보건의료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산하여 전 국민의 의료 질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와 의료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338.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2024. 9. 5.

Ⅲ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시도 회의 진행('24.9.6) -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9월 6일(금) 10시 서울 비엔디파트너스 지하 2층 강당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하였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회의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제도 시행 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에게 69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21명이며, 그중 2명은 원가정 양육 상담,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다.

구분	누계	7월(7.19~7.31)	8월(8.1~8.31)
상담건수(건)	697	151	546
신청건수*(명)	21	7	14

※ 보호출산 신청자 중 2명은 보호출산 철회

- 향후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1308 전화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의 인지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

- 또한, 보건복지부는 '25년 예산 정부안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편성했다고 밝혔다.(5.4억 원 증)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아 후견인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게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 등을 활용해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현황, ▲ 지역 맞춤형 홍보 추진 현황, ▲ 보호출산 아동 보호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공유하였다.

- 일부 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신설하여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340. 아동정책과. 2024. 9. 6.

IV

일가정 양립,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함께 한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 -
- 성공적 제도운영 경험 공유,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
- 참석자 현장견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꼭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 추진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월 25일(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계자, 국회·경제계·금융계 등 주요 인사,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지난 6.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책 보완을 해 왔으며,

- 앞으로 일·가정 양립의 실천주체인 민간 부문, 특히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기업문화 전 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공유회 주요 내용】

■ 이번 성과공유회는 ① 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②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였다.

①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 및 온라인 협업 툴을 적극 활용하여 코어타임(필수 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 중이다.

-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효과적이고 원하는 시간대에 업무에 몰입하고, 충분한 육아시간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 입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직률(%): ('21년말) 46 → ('23년말) 12 / 매출액(억 원): ('21년) 647 → ('22년) 1,018

②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에서는 생산직, 사무직, 영업직 등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집합근무가 필요한 생산공장에서는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연구직 직원들은 시차출퇴근제를, 외근이 잦은 영업직 직원들은 스마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 월·목은 8시간, 화·수·금·토는 11시간 30분씩 근무하여 금·토·일 휴무를 보장

- 이러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업체도 생산성 하락없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로 남성 직원들의 육아참여*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자녀양육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중인 직원의 71%가 남성

③ 대기업인 LG전자는 임신 전부터 임신기,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임신 전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최대 6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장시간 안정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3개월의 난임치료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임신기에는 법정 육아휴직과 별도의 6개월간 임신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삭감 없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육아휴직은 법정기간에 1년을 더해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용시 평균 수준의 인사평가 등급 보장, 원래 일하던 부서로의 복귀 등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④ 포스코는 그룹사,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 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 광양 2개소)을 운영 중이다.

-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현재 협력사와 지역기업 등을 포함하여 총 190개社* 직원 자녀들이 이용 가능하며, 전체 정원 중 협력사 자녀 비중 50%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포항) 그룹사 21개, 협력사 50개 (광양) 그룹사 19개, 협력사·지역기업 100개

-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협력사 직원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덕분에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자신도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법적기준 대비 2배 높은 급식비·넓은 보육공간 및 원어민 영어교육 등 제공

⑤ 신한금융그룹은 임신 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3.10월~'24.3월까지 총 585쌍의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다음달부터는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추가지원과 함께 고위험 임신부를 위한 병실 입원료 지원도 준비 중이다.
-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시설인 신한꿈도담터를 전국적으로 200개소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지원을 위해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하였다.

*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25년부터 최대 월 120만원)에 더해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

⑥ 지자체 대표로 발표한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생활 균형 실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특색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 먼저,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기업에서 출산장려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하고, 시에서는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 (진입형: 100P-) 육아휴직 대체인력, 동료응원수당 등 → (성장형: 500P-) 진입형 +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등 → (선도형: 1,000P-) 성장형 + 市세무조사 유예, 시장표창 등

-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① 경력보유 여성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② 야간·간급돌봄을 위한 민간서비스 이용시 서비스 이용요금 2/3 지원, ③ 임신·출산에 따른 휴업시 임대료 및 영업손실액 지원(최대 50만원) 등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현장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주요 내용 】

■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앞으로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 ②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우선,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긍정적 검토 지자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 대체인력 풀 확충을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④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 120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3년), 1일 자녀돌봄시간 48분(OECD, '15년)

-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

-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좀 더 쉽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휴가 사용절차 개선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 통과(9.12)

⑥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례와 같은 민간의 상생노력에 발맞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9월 중 청사어린이집 가이드라인 마련(행안부) → 10월 중 각 청사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

-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의 경우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논의 등을 통해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정부청사 외 국가기관(328개소), 공공기관(138개소)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 ⑦ 자영업자, 플랫폼종사자, 특수고용·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관계부처 T/F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⑧ 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각각의 단체협의회에 「일·가정 양립 위원회기칭」을 설치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수렴과 세미나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계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고용부, 중기부, 저고위 등 정부도 필요시 각 단체협의회에서 구성한 「일·가정 양립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⑨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 가족의 가치와 육아의 즐거움을 담은 프로그램이 방송계에서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층에게 소구력이 높은 매체(예: SNS 채널을 활용한 쇼츠 영상 등)를 활용하여 가족 친화적 메시지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극단을 내년부터 신규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은 음악·무용·연극 등 현재 100개 팀 지원에 더해 시각예술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110개 팀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용산 어린이정원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지역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9개소를 신규 건립하여 총 12개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에도 저출생 3대 핵심 분야 예산만큼은 올해보다 22.2% 늘린 19조 7천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였다.

- 또한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5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며, 지난 분기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7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는 확실히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이어,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저출생과 인구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며, 지난 8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만들었는데,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 사례집에는 오늘 행사에서 발표된 사례를 포함하여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 온 35개 기업*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 * 대기업 7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8개사, 금융권 12개사 등
 -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내용 소개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직원들의 인터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상세히 담고 있다.
-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391. 인구정책총괄과. 2024. 9. 25.